

종합건설업계,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힘모은다

종합건설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춘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사진)는 회장 자문기구로 대기업 회원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대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 주택, 금융·세제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 회원사 임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임기는 4년이며 초대 위원은 현 회장의 임기와 같은 3년이다.

대기업위원회는 대기업 회원사 관련 업무 가운데 △신수요 창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건설정책 및 주요 제도 개선 방안 △해외건설 관련 제도 개선



건협, 대기업정책추진실 신설
건설정책 개선안 등 논의
건설산업원로회의도 운영

및 수주확대 방안 △기업 간 협력 강화 및 공정·투명한 경쟁문화 제고 방안 등을 주로 다룬다.

대기업위원회가 심의·자문을 결정한 사항 중 중요 안건은 회장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건협은 현재 윤리위원회, 기획

위원회, 사회공헌사업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위원회에 이어 대기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정책·제도·사업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원로의 시각을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도 구축된다.

건협은 지난 7일 ‘건설산업원로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원로회의는 전임 협회 회장과 시·도 회장, 대의원, 제위원회 위원 가운데 30인 이내로 꾸려진다. 임기는 대기업위원회와 같다. 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더라도 재임 중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원로회의는 건설업계 원로에 대한 자문을 통해 △건설산업 정책방향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 △대·중소 및 지역·경향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 △회원사 및 유관단체 간 협력증진 및 이해상충 조정 방안 △협회 운영 관련 애로 사항 해소방안 등을 듣는다.

대기업위원회와 원로회의는 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회원사의 협회 참여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해 온 유주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 회장은 “대기업위원회, 원로회의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륜 있고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협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